

# 정치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 :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이성우\*\*

### 논문 요약

본 논문은 정치제도 조합효과가 정치경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정치제도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 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 역량의 변화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효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제도의 효과가 다른 기타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정부형태 변경 논의에서 선거제도의 조합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치제도 변경의 기대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제어:** 정치제도, 정부형태, 선거제도, 조합효과, 정치경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1021510)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각각의 효과와 함께 그 조합된 정치제도의 효과가 한 국가의 정치경제 현상과 질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정치제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정치질서, 경제질서, 국가의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각 영역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 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대리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정치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정부형태(form of government)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변경하려는 정치제도는 정부형태이다. 권위주의시기에는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고 정부형태를 변경하였다.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개헌을 한다. 정부형태는 정치제도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정부형태는 권력이 현직에서 어떻게 행사되는지, 선출된 대표자들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을 정하는 것이다(Persson and Tabellini 2005, 12). 또 하나 중요한 정치제도는 선거제도(electoral system)이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도구(Powell 2000)로서, 유권자의 선호가 모여지는 방식과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대표자들에 의해 획득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Persson and Tabellini 2005).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통해 권력의 소재와 권력의 위임방식, 권한의 정도가 결정이 되고, 그 권력을 행사할 대표자와 정당의 구성과 선출에 관한 원칙이 결정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질서의 구현은 어느 한 제도의 효과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국가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부형태 변경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선거제도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두 제도의 조합효과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정치제도의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조합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제도가 제도 원리 상 의도된 효과가 있지만,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 결과가 개별 제도의 의도하는 효과와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II. 기존연구검토

정치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치제도가 정치체제의 생존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두 번째, 정치제도가 경제적 성장과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세 번째, 정치제도가 가지는 종합적인 정치경제적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연구이다.

우선, 정치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정치적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부

형태가 민주주의의 생존과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린츠(Linz 1990, 1994)는 대통령제의 위험성과 의원내각제의 강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두 축이 병존하는 이원적 민주 정통성(dual democratic legitimacy)을 지니고 있기에 이 둘의 교착과 대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이 상호의존적인 동시에 상호 취약하여 협의와 합의의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우월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aster 1997; Fabbrini 1995; Lijphart 1992; Mainwaring 1993; Riggs 1988; Stepan and Skach 1993). 반면, 대통령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Horowitz 1990; Lardeyret 1991; Lopez-Pintor 1987; Reynolds 1995; Mainwaring and Shugart 1997). 이 연구들에 의하면 수상이 국민이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와 비교하여 볼 때,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더 우월한 제도인가가 초기 정부형태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은 연구경향을 앞선 정부형태의 효과에 대한 경험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메인워링과 슈가트(Mainwaring and Shugart 1997)는 1967년부터 1992년 기간 동안 최소 25년 이상 붕괴 없이 지속된 민주주의 31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31개국 중 24개국이 의원내각제, 4개국이 대통령제, 3개국이 이원집정제였다. 메인워링과 슈가트는 이 연구를 통해 의원내각제와 안정적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스테판과 스카치(Stepan and Skach 1993)는 1973년부터 1989년 사이 적어도 1년 이상 민주주의 경험한 비OECD 5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8개국이 의원내각제 25개국이 대통령제국가였다. 이중 10년 이상 민주주의 체제였던 국가는 의원내각제 국가 중 17개국, 대통령제 국가 중 5개국이었다. 스테판과 스카치는 대통령제 국가가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민주체제 위기와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판과 스카치는 1945년부터 1979년 기간 동안 독립한 93개국 중 1980년부터 1989년 사이의 10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 유지 국가를 조사했다. 독립 당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41개국 중 15개국이 10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고, 대통령제 채택 국가 36개국 중에서는 1개 국가도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기반 하여, 스테판과 스카치는 제3세계 국가에서 대통령제 민주주의체제는 지속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초기 정부형태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에 비해 안정적이지 않은 제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후속 연구들은 기존연구의 결과를 재검토하였다. 슈가트와 캐리(Shugart and Carey 1992)는 “과연 대통령제 국가가 더 쉽게 붕괴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190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붕괴한 민주주의 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2회 이상 민주적 선거를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한 사례를 조사했다. 민주주의 붕괴 경험국가는 39개국, 그중 21개국은 의원내각제, 12개국은 대통령제였고, 의원내각제적 이원집정제 국가 1개국, 준대통령제 5개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전간기에 민주주의 붕괴된 나라들은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였고, 1960년대 붕괴된 국가들은 대체로 대통령제였다. 2회 이상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 48개국 중 의원내각제 27개국, 대통령

제 12개국, 기타 9개국이었다. 대통령제 국가의 붕괴비율은 50%, 의원내각제 국가의 붕괴비율은 43.8%였다. 제3세계 국가만 보면, 의원내각제 성공은 9개국, 실패는 13개국으로 붕괴비율은 59.1%였으며, 대통령제 성공은 11개국, 실패 12개국으로 붕괴비율은 52.2%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슈가트와 캐리는 제3세계에서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안정적 민주주의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가 약하고, 결국 통치구조와 민주주의 공고화 사이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결론 내린다. 한편, 파워와 가시오로프스키(Power and Gasiorowski 1997)는 1930년부터 1995년 기간 동안 제3세계에서 1980년 기준으로 1백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진 국가들 중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 성공과 실패국가로 구분하여 56개국을 조사하였다. 민주주의 공고화 판단기준은 첫째, 민주적 이행의 정초선거 다음에 선거 실시여부(56개국 중 40개국 민주주의 공고화 성공), 둘째, 선거 통해 행정부의 정당 간 교체여부(29개국 민주주의 공고화 성공), 셋째, 1995년 12월 현재까지 최소 12년간 민주주의 지속여부(18개국 민주주의 공고화 성공)였다. 첫 번째 기준에서 대통령제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 비율은 68.7%였고, 의원내각제는 75%였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대통령제에서 53.3%, 의원내각제에서는 54.2%였으며, 세 번째 기준에서는 대통령제 61.5%, 의원내각제가 56.4%였다. 연구결과, 세 기준 모두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제도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파워와 가시오로프스키의 연구는 제3세계에서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공고화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형태 연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각 국가가 맥락별로 제도가 적응이 되면 그에 맞는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정부형태의 변경만으로 정치체제의 수준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 중에서는 베른하르트, 노드스토크와 리녹(Bernhard, Nordstrom and Reenock 2001)의 연구결과도 유사하다. 이들은 1919년부터 1995년 사이에 존재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제도와 민주주의의 생존 및 유지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뒤,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기 쉬운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생존,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뒤를 이어 정치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경제적 효과 중 가장 먼저 관심을 받은 것은 경제성장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미치는 정치제도의 효과였다(Persson and Tabellini 2005; Rodrik 1996). 그리고 정치제도의 국가별 경제제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North 1990; Acemoglu et al. 2001; Persson 2005). 경제적 효과와 연관되어 대통령제가 특정 이익집단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적 역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Olson 2008). 정부형태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도 별도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선거제도는 공적영역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는 조세와 공공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다(Persson 2005; Persson and Tabellini 2004; 2005). 반면에, 정부형태 중 대통령제는 공공지출과 조세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Persson et al. 2000; Persson and Tabellini 2004). 이처럼 개별 연구마다 매우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왔고, 연구자들 간에 명확한 합의점은 없다. 연구자들 간에 특정제도가 보편적으로 더 영향이 있다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다(Knutsen 2011).

이밖에 정치제도와 부패, 정치제도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 정치제도와 물가수준과의 관계 등 다양한 정치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게링과 태커(John Gerring and Strom C. Thacker)는 정치제도와 부패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원적 정치체제와 의회주의 정부형태에서 부패수준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Gerring and Thacker 2004). 버치필드와 크레페즈(Vicki Birchfield and Markus M. L. Crepez)는 18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헌정구조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합의제적 정치제도들이 체계적으로 더 낮은 소득불평등과 연관되고, 다수제 정치제도들은 반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Birchfield and Crepez 1998). 창, 카이저 로고우스키(Chang, Kayser and Rogowski)는 실질물가(real price)가 비례 대표제에서 보다 소선거구제하에서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10%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다음 연구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경쟁과 그 균형점에서 물가가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Chang, Kayser and Rogowski 2011). 높은 물가, 약한 경쟁, 그리고 진입규제장벽은 생산자와 기업들이 선호하는 정부정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몇몇 정부 하에서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정책들의 승리는 생산자들이 정치적으로 소비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기존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효과 모두를 고려하거나 두 제도간이 조합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제도의 효과가 다양한 정치경제적 현상에 미치는 다양한 제도의 효과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정치제도의 효과 연구에서 정부형태만 고려하거나, 선거제도의 효과만 살펴보는 등의 연구경향이 주를 이룬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제도 조합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다. 우선, 어떤 나라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중 어떤 제도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찾는 연구가 있다. 아래의 <표 1>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유형에 대한 레이하트(Lijphart)의 분류이다.

| 표 1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기본유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다수주의 선거	미국,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영국, 영연방국가(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말레이시아, 자마이카
비례주의 선거	라틴 아메리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자료 : Lijphart 1991, 74

레이하트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형태와 선거제도간의 조합이 자연스럽게 일정한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 순수한 대통령제와 다수제 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이다.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 조합

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의원내각제와 다수주의 선거를 결합한 국가는 영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자메이카,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과거 영국 식민지 국가들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국가들은 대부분 서유럽 국가에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정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국가들이 지리적, 문화적, 식민지 유산의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정치제도적 맥락 형성은 역사적으로 자발적 모방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제도들이 주변 국가나 식민지 국가들에 전파되어 그 나라의 정치제도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의 제도는 영국의 식민지 국가에서 많이 채택하였고, 미국의 대통령제는 19세기에 많은 남미국가들이 모방하였다. 20세기 초, 비례대표제는 유럽대륙 국가들과 남미국가들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는 단순히 당파적 승용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의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폭넓게 인식되었고, ‘민주적 미래의 물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Lijphart 1991, 75).

또한,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상황이 제도 채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경우 분절적 사회에서 종교, 인종, 계급, 지역, 이데올로기 등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의 구조 속에서 선택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유럽대륙의 국가들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인종과 종교적 소수자들 문제가 있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자들에게 대표권을 부여하여 국가와 정치적 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둘째, 민주화과정에서의 동학(dynamics)이다. 비례대표제는 아래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의 압력을 수렴하면서 타협적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노동계급은 투표권의 확대를 통한 의회로의 진입을 원했고, 기득권세력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원했다(Lijphart 1991, 75).

정부형태와 정당체계의 조합에 대한 연구도 있다. 듀베르제에 의하면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좋은 조합효과를 보이며, 의원내각제에서는 다당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Duverger 1967). 정당체계는 민주주의 생존과 안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의 결과에 따라 정당체계 형성의 기본 조건이 형성된다. 최근에 점차 정치제도의 조합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게링, 태커, 모레노(John Gerring, Strom C., Thacker and Carola Moreno)는 왜 어떤 민주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더 성공적인가? 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정치제도의 조합을 구심주의(Centripetalism)과 분권주의(Decentralism) 으로 구분하였다. 구심주의는 단일정부, 단원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이며, 분권주의는 연방제, 양원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이다. 분석결과, 중앙 집중된 권력과 폭넓은 포괄성의 목표가 조화를 이룰 때 민주제도가 최상의 작동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구심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8가지 거버넌스 지표(관료의 질, 세수, 투자율, 무역 개방성, 1인당 실질 GDP,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문맹률)에 대한 실증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Gerring, Thacker, and Moreno 2005). 그리고 넷센(Carl Henik Knutsen)은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센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형태의 경제적 효과는 확실하지 않

고,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준비례대표제 또한 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Knutsen 2011).

본 논문은 정치제도를 구심주의와 분권주의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 게링, 태커와 모레노의 연구의 분류가 너무 많은 요인들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였다고 본다. 연방제, 대통령제, 단원제, 소선거구제를 하나로 묶어 분권주의로 분류하였고, 중앙집권체제, 단원제, 의원내각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나로 묶어서 구심주의 체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여러 다양한 제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도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분류한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로 설정한 8가지 거버넌스 지표(관료의 질, 세수, 투자율, 무역 개방성, 1인당 실질 GDP,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문맹률)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문맹률 등은 정치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변수들이다. 관료의 질을 높이고, 유아사망률과 문맹률을 낮추고, 기대수명을 올리는 것은 국가별 정치경제적 수준이라는 기본 조건에서 시행된 국가 정책의 결과이지 정치제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제도는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그 갈등해소방식은 무엇인지, 어떤 제도에서 어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활동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는지에 영향을 준다.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문맹률과 같은 변수들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관련 변수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매우 많다.

최근 연구에서 제도 조합의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조합이 역사적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정부형태와 정당체계의 조합 효과를 측정한 연구도 있다. 정치적 원리와 정치적 행위가 정치경제적 결과로 나오는데 있어서 정치제도의 작동이 미치는 복합적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정치제도의 효과와 가설

일반적으로 정치 제도 작동의 효과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같은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더라도 선거제도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한 사회에서 권력의 행사 양식, 정치적 갈등해소방식, 정당체계의 형성과 유지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채택하였더라도 내각제이나 대통령제에 따라서 권력의 책임 소재는 달라진다. 따라서 정치제도의 변경을 생각할 때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각각 따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둘의 조합과 그 효과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레이하트(Lijphart)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결합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와 조합된 의원내각제도가 매력적인 정부형태-선거제도 조합이라고 주장한다(Lijphart 1991).

다수제 규칙은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하도록 맞춰져 있고, 비례대표제 규칙에서는 입법과정에서 다른 유권자들을 대변하는데 맞춰져 있다. 정부형태에서도 비슷한 교환관계가 형성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책임성에 맞춰져 있다. 이는 단일 행정 권력이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특권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표성에 더 중점을 두는데, 이는 정부가 대표하고, 의회에서는 가능한 이질적인 연합을 함께 두도록 하기 때문이다 (Persson and Tabellini 2005, 12).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유형과 정당체계에 다수주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합의주의 효과를 가진다. 형태적으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분리되어있으므로 해서 대통령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통령제는 양당체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가장 큰 정당일 확률이 높고, 의회선거가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정당이 의회 선거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Lijphart 1991, 73).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도의 원리는 현실에서 강한 권력을 추구하려는 속성으로 인해 큰 여당을 지향하게 되고, 큰 여당에 대항하기 위한 야당세력의 연합으로 인해 양당제로 정당체계가 형성되기 쉽다. 여기에 선거제도가 다수제나 비례제나에 따라 편차가 생긴다.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체제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의회 선거제도가 비례제라면 다당제로 갈 개연성도 증가한다. 양당제와 다당제로의 차이가 발생하면, 정치경제적 질서의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의회는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간의 협상을 통해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개의 큰 정당이 존재하고 소규모 정당이 여럿 있다면 두 정당 사이에서 거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 다수제에 비해 비례제에서 다당제 하에서의 정당 간 합종연횡과 그에 따른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

가설 설명에 앞서 종속변수 설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종속변수는 제도 효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변수와 제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정치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정치경제적 영향이 명확한 요소도 있지만, 제도 효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들도 있다. 제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제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종속변수에 포함하였다. 제도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종속변수는 국민 경제생활, 국가역량, 체제지속성 변수이다. 국민경제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의 행정역량에 정치제도의 효과가 있는지, 안정적인 정치제도가 체제지속성을 높이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변수들은 경제성장정책과 국가체제 개선, 국가별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 등이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제도의 효과가 있을 것을 보이는 종속변수는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 변수이다. 정치제도는 결국 정치적 경쟁의 원리와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치제도가 변화될 때 정치적 경쟁성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정치제도의 변경이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 유지, 축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변수이다. 선진국일수록 경제문제는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경제제도운용이 안착되어있다. 하지만, 정치는 언제나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유권자들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경제문제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동기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제도의 효과로 인하여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정치적 경쟁성은 권력분립과 정치적 책임성의 명확함을 추구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증가, 권력융합과 의회 내 합의가 중요한 내각제에서는 감소, 준대통령제에서는 정부구성에 주로 참여하는 주요 정당간의 합의와 경쟁의 양태에 따라 제도운용의 영향력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주요 정치세력간의 정치행태에 따라 제도의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 선거제도의 효과는 비례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한 제도로서 감소할 것이며, 다수제는 다수제 원칙에 따라 정치적 경쟁성이 증가할 것이다. 대통령제/비례제는 비례제의 합의주의적 제도원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대통령제/다수제는 증가할 것이다. 소수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보호되는 내각제/비례제는 감소, 다수주의 원리에 투영되기 때문에 내각제/다수제는 정치적 경쟁성이 증가할 것이다. 준대통령제하의 제도 조합은 제도원리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준대통령제는 연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정치 환경 변화와 변화에 따른 차이가 크다.

두 번째,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다수에 의한 제도운용이 우선인 대통령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내각제와 준대통령제에서는 확대될 것이다. 비례제 선거제도도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긍정적일 것이다. 반면에, 다수제 선거제도에서는 기존의 다수 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는 소극적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제/비례제에서는 대통령제/다수제에 비해 비례제의 효과로 인하여 정치적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더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변수이다. 민주주의가 안착되고, 제도운용이 잘 되는 국가일수록 경제영역에 대한 가변적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 정치적 개입의 여지는 언제든지 존재한다. 제도적 원리에 따라 각 제도별 차이를 고려해본다. 우선, 대통령제는 내각제에 비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책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에 따른 경제이슈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추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반면에 내각제는 집합적이고 합의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주요 정책이 결정되며, 합의정신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경제주체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기 때문에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을 더 잘 보장될 것이다. 준대통령제는 내각의 운용에 있어서 내각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각제와 동일하게 독립적 운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선거제도로서 비례제도 내각제와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며, 다수제는 일반 유권자들에 의한 다수정치연합이 촉진되는 제도로서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에 대한 개입 여지가 존재한다. 대통령제/비례제는 두 제도의 조합효과의 양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대통령제/다수제는 둘 다 다수 유권자의 선호에 따르는 제도로서 감소할 것이다. 내각제/비례제와 내각제/다수제도 내각제의 합의적 제도원리에 따라 독립적 제도운용에 대한 개입이 감소할 것이다. 준대통령제/비례제와 준대통령제/다수제도 합의주의 제도원리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아래의 <표 2>로 정리하였다.

| 표 2 | 정치제도 효과에 대한 가설

	정치적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역량	체제지속성
대통령제	증가	감소	감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내각제	감소	확대	증가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준대통령제	증가/감소	확대	증가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비례제	감소	확대	증가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다수제	증가	감소	감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대통령제/비례제	감소	확대	증가/감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대통령제/다수제	증가	감소	감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내각제/비례제	감소	확대	증가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내각제/다수제	증가	감소	증가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준대통령제/비례제	증가/감소	증가	증가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준대통령제/다수제	증가/감소	증가	증가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제도별 차이 없음

## IV. 경험적 분석

### 1. 변수설정, 분석방법과 데이터

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67개국<sup>1</sup>의 자료를 분석한다. 변수들은 PolityIV (Marshall et al. 201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The World Bank Group 2016),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2015(Cruz, Keefer and Scartascini 2016)에서 선택하였다.

<sup>1</sup>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우선,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명한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 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 역량이다. 이를 분석하고자 사용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지속성(Regime Durability)은 Poity 4 데이터셋의 durable 변수를 사용하였다. durable 변수는 가장 최근의 체제변환이후 지속된 햇수를 보여준다. 체제전환 이후 첫해를 0으로 코딩하여 이후 햇수를 계산하여 만들어졌다. 정치체제 변환이후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타당성을 가진다. 둘째, 정치경쟁성은 Poity 4 데이터셋의 polcomp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정치적 선호를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한 참여의 규제 수준을 나타는 parreg 변수와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참여의 경쟁성 변수인 parcomp 변수를 조합한 변수로서 정치참여의 경쟁성을 보여준다. 1에서 10까지 억압적인 체제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제도화된 선거제 시행을 의미한다. 셋째, 정치적 대표성 지표는 제도의 효과로 정치적 대표성의 증대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수집되어있는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에서 집계한 자료이다. 의회 내에 여성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비율변수이다. 이 변수는 0에서 105.86까지 기록된 연속형 변수이며, 높을수록 여성 의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정치적 대표성이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소수자로서 정치적 대표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정치엘리트 중에서도 여성비율이 낮은 국가들이 많이 존재한다. 여성의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대표성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뜻한다. 넷째, 경제제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변수로는 중앙은행독립성을 선택하였다. 중앙은행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경제영역의 주요 결정들이 정치적 외압의 영향력이 약하고 경제기구내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독립성(Central Bank Independence)은 개리거(Ana Carolina Garriga)의 CBI dataset에서 Garriga의 중앙은행독립성 변수를 사용한다. 개리거의 지표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의 182개국의 연간 법률상의 중앙은행 독립성 지표이다(Garriga 2016). 0.09에서 0.9까지 세분화된 측정으로 선진국(developed countries)만 다루어왔던 기존 지표와 달리 개발도상국들(developing countries)도 포함되어있다. 이 변수는 중앙은행장의 임명, 중앙은행의 목적, 통화정책의 결정권한과 자율성, 대출권한과 자율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지표화하였다.

다섯째, 국민경제생활을 보여주는 변수로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있는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constant LCU)을 사용하였다. 국내총소득은 내국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실질국내총생산(GDP)에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 개념으로서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사회 및 경제영역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GDP대비 세수비율(Tax Revenue % of GDP)이다.

독립변수는 정치체도변수로서 대통령제, 내각제, 준대통령제, 하원 비례제, 하원 다수제 변수를 각기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제/비례제, 대통령제/다수제, 내각제/비례제, 내각제/다수제, 준대통령제/비례제, 준대통령제/다수제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정부형태변수는 DPI 2015 데이터셋에 있는 System 변수의 각 체도를 각각 따로 뽑아 대통령제, 내각제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선거제도는 하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보았고, *housesys* 변수에서 각각 비례제와 다수제의 변수를 별도 설정하여 더미 변수를 만들었다. 개별 시간별, 국가별 특성은 모든 분석 모델에 국가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수는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한다. 각 국가별 정치경제적 수준과 국가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변수, 민주주의수준(*polity2*) 변수, 그리고 총인구(*population total*)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WDI dataset과 *polity 4 dataset*에서 선택하였다. *PolityIV*에서 민주주의는 달(Dahl)의 폴리야키(*polyarchy*) 개념에 기반하여 권력자의 선출방식, 정치참여 범위, 권력자의 권한제한 등을 기준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하였다. *polity2*는 권위주의 지표(*Autoc*)와 민주주의 지표(*Democ*)를 합쳐서 만든 *Polity* 변수의 수정지표이다. 총인구는 WDI indicators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세 가지를 사용한다. 통합 OLS(Pooled OLS) 분석 중 패널 수정 표준오차 모형(*linear regression with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분석과 패널분석 이원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two-way error component model*) 분석을 시행한다. 그리고 변수의 특성이 다른 체제지속성 변수에 미치는 정치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사 분석(*survival analysis*)을 시도한다.

통합 OLS(Pooled OLS) 분석은 패널 자료가 기본 OLS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시간효과를 통제하기 보다는 시간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활용하게 시간의 선형 추세나 2차형 추세를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패널 수정 표준오차 모형(*Linear regression with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은 AR(1) 모형을 상정한 통합 OLS 추정량과 통합 OLS 추정량에 대한 장기 패널-수정(*panel-corrected*) 표준오차를 계산한다(Cameron and Trivedi 2009, 266-267).

본 논문은 패널 데이터 분석 중 고정효과 모형을 시행한다.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확률 효과(*random effect*) 모형은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이 타당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한다. 즉 기울기 모수인  $\beta$ 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서로 동일하지만, 상수항( $\alpha + v_i$ )는 패널 개체별로 달라진다(민인식·최필선 2009, 123). 따라서 패널 간에 시간상수(*time-constant*)적인 요인과 패널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모두 통제함으로써 패널 내에서의 변화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고정효과모형은 맥락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모형으로서, 국가 간, 패널 간 차이를 통제하여 패널 내에서의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측정하고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 모형이다. 여러 고정효과 모형 중 이원 오차성분(*two-way error component*)모형을 사용한다. 이원 오차성분 모형은 오차항을  $\varepsilon_i = u_i + \mu_t + e_i$  처럼 세부분으로 나눈다.  $u_i$ 는 관찰되지 않는 그룹의 특성을 통제하고,  $\mu_t$ 는 관찰되지 않는 시간특성을 통제하고 있다. 고정효과 일원 오차성분 모형에서는 이중 하나의 오차항만 포함시키는데 반해, 이원 고정효과 모형은 두 개 모두를 추정해야할 모수로 간주하여 설명력을 증대시킨다. 이원 고정효과 모형의 장점은 독립변수와 관찰되지 않는 그룹 및 시간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beta$ 에 대한 일차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패널 그룹 개

수(n-1)에 시점 개수(T-1)를 더한 만큼 자유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21-22). 이상의 이유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모형은 패널분석 이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two-way error component model)을 사용한다.

체제지속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한다. 사건사 분석에서 사건(event)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속변수가 질적으로 변화(qualitative change)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의 실질적 의미가 달라진다. 사건사 분석은 시간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정 상태로 진입해서 탈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서 체제지속성 변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사건사 분석은 연구대상을 일정시간 추적하여 특정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나아가 시간의 영향을 포함하여 사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판별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사건사 분석 방법 중 체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의 위험률(hazard rate) 분석과 최대우도 추정 모수형 분석(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parametric regression survival-time models)을 시도한다.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은 사건사 분석 기법 중 여러 변수들의 영향을 동시에 알아보는 다변량 분석법이다.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은 생존기간에 대해 어떤 분포형태도 가정하지 않아 비모수적이다. 하지만, 모형에 근거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모수적 방법과 유사하다. 최대우도 추정 모수형 분석은 특정 상품이나 개인의 생존기간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모수형 분석모형은 독립변수가 기저선 생존기간에 exp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속화 고장모형(accelerated failure model)이라고도 부른다. 이상의 세가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종속변수들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측정할 것이다.

## 2. 통합 OLS 패널 수정 표준오차 모형 분석

통합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중 공선성 문제로 누락된 변수도 모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표시하였다. 우선 정치적 경쟁성 변수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제변수는 4.315의 매우 큰 계수 값으로 정(+)의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 대통령제와 함께 정(+)의 효과를 가지는 변수는 비례제와 다수제로 모두 각 제도 자체의 효과만을 측정한 변수이다. 준대통령제는 -1.776의 계수 값으로 부(-)의 효과를 가진다. 준대통령제와 함께 부(-)의 효과를 가지는 유의미한 변수는 대통령제/비례제와 대통령제/다수제 변수이다. 두 변수 모두 각각 -5.585와 -4.652의 계수 값으로 강한 효과를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형태 중 대통령제와 선거제도의 조합의 효과로 정치적 경쟁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수준과 총인구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정치적 경쟁성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

| 표 3 | 통합 OLS 패널 수정 표준오차 모형 분석

	정치적 경쟁성	의회여성의원비율	중앙은행독립성	국내총소득	GDP대비세수율
대통령제	4.315** (1.527)	3.996 (4.426)	-0.286** (0.0900)	7.273 (8.593)	2.712 (4.032)
내각제	-	-	-	-7.387 (9.006)	-
준대통령제	-1.776*** (0.521)	6.141 (5.768)	-0.291* (0.123)	1.6505 (8.883)	1.303 (3.055)
비례제	4.964** (1.653)	-4.673 (6.800)	-	-1.466*** (2.806)	-
다수제	4.236** (1.582)	-2.823 (5.071)	-0.0552 (0.0882)	1.233 (2.427)	-2.022 (2.987)
대통령제/비례제	-5.585*** (1.613)	0.220 (5.295)	0.0271 (0.0778)	1.427*** (1.934)	-2.590 (1.554)
대통령제/다수제	-4.652** (1.602)	-	-	-	-2.752 (2.828)
내각제/비례제	-0.640 (0.477)	7.079 (6.141)	-0.169 (0.0966)	1.520*** (2.272)	-0.547 (3.202)
내각제/다수제	-	-	-	-	-
준대통령제/비례제	-	-	-	-	-
준대통령제/다수제	-	-	0.145 (0.117)	-	-
1인당 국내총생산 (log)	0.127 (0.196)	5.282* (2.577)	0.0617 (0.0577)	6.396 (1.114)	3.660** (1.329)
민주주의수준	0.417*** (0.0107)	0.119 (0.181)	0.00645 (0.00424)	2.778*** (6.376)	-0.0851 (0.0812)
총인구	3.04* (1.28)	-2.49 (2.86)	-9.61 (5.67)	1533994.6 (1050591.7)	-6.05 (1.07)
_cons	0.0	-40.29* (20.23)	-0.0268 (0.450)	0.0	-12.00 (11.25)
N	1632	1261	1398	1612	1294
R-sq	0.955	0.928	0.809	0.939	0.889
rmse	0.514	4.019	0.105	1.880	2.44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lt;0.05, \*\* p&lt;0.01, \*\*\* p&lt;0.001

※ 국가별, 연도별 더미변수의 결과 값은 보고하지 않았음

다음으로,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지표로서 의회의 여성의원비율 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본다.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 변수로서 5.282의 계수 값으로 정(+)의 관계를 갖는다.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는 정치제도의 효과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연관된 변수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중앙은행독립성지표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변수는 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 변수이다. 각기 -0.286, -0.291의 계수 값으로 부(-)의

효과를 가진다. 대통령제와 함께 준대통령제 하에서도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에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일정하게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제도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던 국내총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례제(-1.466), 대통령제/비례제(1.427), 내각제/비례제(1.520), 그리고 통제변수 중 민주주의 수준(2.778) 변수가 있다. 비례제 변수만 제외하고 모두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례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의 효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GDP대비 세수비율을 지표로 삼은 국가역량 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 변수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3.660의 계수 값을 가진다. 국가역량은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역량을 보는 변수로서 정치제도의 효과 없이 경제적 수준이 증대될수록 국가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3.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분석

위의 통합 OLS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표 4>에서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 OLS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선성 문제로 누락된 변수도 함께 표시하였다. 정치적 경쟁성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통령제(1.475), 내각제(1.718), 대통령제/비례제(-0.973), 내각제/비례제(-0.545) 이고, 통제변수 중에는 민주주의수준(0.418)과 총인구(3.06) 변수이다. 정부형태만의 변수인 대통령제와 내각제변수는 정(+)의 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두 제도의 조합 변수 중 대통령제/비례제와 내각제/비례제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 이를 통해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효과로 정치적경쟁성의 정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합의주의 제도원리에 기반 한 비례제의 효과로 인하여 정치적 경쟁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대표성 변수에는 내각제(-6.006), 내각제/비례제(7.235), 통제변수 중 1인당국내총생산(5.147)과 총인구(-2.52)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 내각제는 부(-)의 관계이지만, 내각제/비례제 조합변수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개별 정치제도와 정치제도의 조합효과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표 4 |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분석

	정치적경쟁성	의회여성의원비율	중앙은행독립성	국내총소득	GDP대비세수율
대통령제	1.475*** (0.162)	-2.277 (1.849)	-0.153*** (0.0376)	-8.369 (5.798)	-0.914 (0.934)
내각제	1.718*** (0.275)	-6.006* (2.909)	0.128 (0.0666)	-8.963*** (1.001)	-0.370 (2.028)
준대통령제	-	-	-	-	-
비례제	0.277 (0.312)	-4.461 (3.045)	-0.147* (0.0712)	-1.470*** (1.129)	-2.195 (1.799)
다수제	-0.377 (0.261)	-2.310 (2.264)	-0.0429 (0.0599)	9.9926 (9.488)	-4.821** (1.813)

	정치적경쟁성	의회여성의원비율	중앙은행독립성	국내총소득	GDP대비세수율
대통령제/비례제	-0.973*** (0.214)	0.470 (2.319)	0.187*** (0.0490)	1.432*** (7.681)	-0.242 (1.283)
대통령제/다수제	-	-	-	-	-
내각제/비례제	-0.545* (0.270)	7.235* (2.848)	-0.0105 (0.0645)	1.516*** (9.779)	-1.395 (2.029)
내각제/다수제	-	-	-	-	-
준대통령제/비례제	-	-	-	-	-
준대통령제/다수제	-	-	-	-	-
1인당 국내총생산 (log)	0.122 (0.111)	5.147*** (1.062)	0.0639* (0.0254)	6.375 (4.103)	3.354*** (0.706)
민주주의수준	0.418*** (0.00726)	0.106 (0.0764)	0.0063*** (0.00160)	2.792*** (2.697)	-0.0907* (0.0418)
총인구	3.06*** (7.69)	-2.52** (8.10)	-9.55*** (1.84)	1011300.3*** (280068.6)	-4.60 (4.11)
_cons	2.894** (0.933)	-27.78** (9.126)	-0.0148 (0.211)	1.2993 (3.470)	-8.113 (5.826)
N	1632	1261	1398	1612	1294
R-sq	0.942	0.917	0.760	0.938	0.873
adj. R-sq	0.938	0.909	0.742	0.934	0.863
rmse	0.520	4.041	0.105	1.890	2.47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lt;0.05, \*\* p&lt;0.01, \*\*\* p&lt;0.001

※ 국가별, 연도별 더미변수의 결과값은 보고하지 않았음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변수에는 대통령제(-0.153), 비례제(-0.147), 대통령제/비례제(0.187), 1인당 국내총생산(0.0639), 민주주의 수준(0.0063), 총인구(-9.55)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경제제도의 운용변수에도 개별 정치제도 효과와 정치제도 조합 변수의 효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도 증가함을 추정할 수 있다. 국민경제생활 변수에는 내각제(-8.963), 비례제(-1.470), 대통령제/비례제(1.432), 내각제/비례제(1.516), 민주주의 수준(2.792), 총인구(1011300.0) 변수들이 있다. 내각제와 비례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정(+)의 관계를 가진다. 국민경제생활변수에서도 각 제도와 달리 제도조합 변수는 정(+)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제도간 조합의 효과가 그 자체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국가역량 변수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변수가 독립변수 중에는 다수제 변수 하나뿐이다. 다수제 변수는 -4.821 계수값을 가지고 부(-)의 관계를 보인다. 통제변수 중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3.354)과 민주주의 수준(-0.0907) 변수가 유의미하다.

이상과 같이 통합 OLS 분석과 패널데이터 분석결과 정치제도의 효과가 조합효과와 반대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도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던 국민경제생활 변수와 국가역량 변수에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제도 자체의 효과라기 보다는 제도가 만드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경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누락변수가 발생하였지만, 준대통령제 포함하고 비례제와 다수제를 조합한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통계분석을 한 결과 각 변수별로 정치제도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각 제도의 영향과 달리 조합효과 자체의 별도의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4. 체제 지속성에 대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이어서 변수의 특성이 다른 체제지속성 변수에 미치는 정치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사 분석을 시도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은 사건사 분석 중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의 위험률(hazard rate) 분석과 최대우도 추정 모수형 분석(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parametric regression survival-time models)이다.

우선, <표 5>에서 콕스 비례해저드 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콕스 비례해저드 모형은 독립변수가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을 생존함수의 형태, 해저드 함수의 형태를 알 수 없어도 추정할 수 있다. 해저드 비 즉, 위험률은 연구대상의 해저드가 기저선 해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낸다.

모델 (1)에서는 정치제도만 변수로 설정하였다. 모두 위험률의 정의 계수값으로 생존기간이 짧다는 것을 보여주며, 계수값이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제/비례제 변수이며, 그 다음이 대통령제 변수이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text{위험률}-1)*100]$ 으로 전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전환한 값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는 -14.4%, 내각제 - 51.7%, 비례제 -81.2%, 다수제 -91.5%, 대통령제/비례제 -1.4%, 내각제/비례제는 -40.5%이다. 체제지속성이 가장 긴 변수는 대통령제/비례제 이다. 그냥 대통령제 변수가 -14.4% 인 것을 감안할 때 제도 조합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체제지속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 민주주의 수준, 총인구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생존기간의 차이가 모델(1)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대통령제는 335.6%, 내각제 154%, 비례제 -29.6%, 다수제 -90.2%, 대통령제/비례제 -85.3%, 내각제/비례제는 -76%이다. 통제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 -56.9%, 민주주의 수준 0.7%, 총인구 0%이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생존률은 정의 관계로 대폭 증가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부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제지속성에 제도효과가 다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의 결합하여 체제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표 5 | 체제 지속성에 대한 콕스 비례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체제지속성	(1)		(2)	
	위험률 (Hazard Ratio)	P)  z	위험률 (Hazard Ratio)	P)  z
대통령제	0.856 (.091)	0.148	4.356 (0.754)	0.000
내각제	0.483 (.048)	0.000	2.540 (0.495)	0.000
준대통령제	-	-	-	-
비례제	0.188 (.063)	0.000	0.704 (0.259)	0.342
다수제	0.085 (0.026)	0.000	0.098 (0.031)	0.000
대통령제/비례제	0.986 (0.149)	0.930	0.147 (0.031)	0.000
대통령제/다수제	-	-	-	-
내각제/비례제	0.595 (0.083)	0.000	0.240 (0.05)	0.000
내각제/다수제	-	-	-	-
준대통령제/비례제	-	-	-	-
준대통령제/다수제	-	-	-	-
1인당 국내총생산 (log)	-	-	0.431 (0.016)	0.000
민주주의수준	-	-	1.007 (0.009)	0.433
총인구	-	-	1 (2.21)	0.000

다음으로, <표 6>에서는 체제지속성에 대한 최대우도 추정 모수형 분석모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parametric regression survival-time models)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이 체제지속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편하게 볼 수 있다. 계수의 값이나 그 방향성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했을 때 직관적으로 앞서 분석한 콕스 비례해저드 모형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대통령제, 내각제, 비례제, 다수제, 내각제/비례제 변수이며 모두 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모델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대통령제, 내각제, 다수제, 대통령제/비례제, 내각제/비례제 변수이다. 정(+)의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변수 두가지이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 총인구 변수가 부의 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다.

| 표 6 | 체제지속성에 대한 모수형 분석

	(1)	(2)
대통령제	-0.248* (0.103)	1.580*** (0.172)
내각제	-0.802*** (0.0987)	0.915*** (0.192)
준대통령제	-	-
비례제	-1.696*** (0.335)	-0.232 (0.366)
다수제	-2.460*** (0.311)	-2.279*** (0.312)
대통령제/비례제	0.0962 (0.147)	-2.022*** (0.211)
대통령제/다수제	-	-
내각제/비례제	-0.447** (0.139)	-1.435*** (0.207)
내각제/다수제	-	-
준대통령제/비례제	-	-
준대통령제/다수제	-	-
1인당 국내총생산 (log)	-	-0.826*** (0.0382)
민주주의수준	-	0.00487 (0.00920)
총인구	-	-1.86*** (2.13)
_cons	-1.238*** (0.318)	4.104*** (0.458)
ln_p	0.0960*** (0.0163)	0.291*** (0.0194)
N	2260	158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이상의 사건사 분석 결과, 정치제도가 개별적으로 체제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로 부(-)의 관계로서 체제가 지속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델(2)의 결과를 고려해보면 다른 정치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체제지속성 증가에 정부형태 변수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V. 결론

본 논문은 정치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정치제도의 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치제도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현실의 정치경제적 영향은 두 제도의 조합된 효과로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제도의 효과를 조합된 형태로 분석하고 그 영향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논문은 보여주고자 하였다.

정치제도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서 본 논문은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 독립적 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역량 6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각각의 지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제도의 안정과 변경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정치적 안정성, 제도 내에서의 정치적 경쟁의 활성화, 유권자들의 정치적 대표성 증가, 사회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 국민경제생활의 활성화, 국가의 역량 증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제도는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권력을 운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따라서 정치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질서를 대변하는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변화만으로 변경되지 않는 정치경제적 행태 요소도 감안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통합 OLS 회귀분석과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 분석 모두에서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대통령제와 내각제 효과가 정치적 경쟁성을 증가시키지만, 선거제도와 조합하였을 경우 정치적 경쟁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정치적 대표성 증가는 내각제/비례제가 시행되는 조건에서 일어나지만, 내각제만의 효과에서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정의 효과를 보여준다. 셋째, 경제제도의 독립적운용은 대통령제에서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데, 대통령제/비례제변수와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 넷째, 국민경제생활과 국가역량에서는 정치제도의 효과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약하다. 국내총소득변수에는 내각제, 비례제가 부의 관계를 대통령제/비례제와 내각제/비례제가 정의 관계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정치제도 간의 조합 효과가 조건에 따라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효과와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제도 개선 요구가 발생하거나, 정치제도 변경을 논의할 때 우선적으로 정치제도의 조합된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국가들은 국민들과 정치엘리트들의 논쟁과 토론에 의해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형태를 변경하고, 선거제도에 변화를 추구한다. 정치제도를 변경하면서 추구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분야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일 것이다. 우선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변화는 체제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정치엘리트간의 정치적 경쟁성이 증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호가 더 많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정치영역에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잘 대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유권자의 선호가 반영된 국가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제도의 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국가의 역량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제도는 국가의 근본 토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사회내의 많은 제도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정치제도의 효과와 변경에 따른 결과는 사회의 각 제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정치제도 변경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제도 조합의 효과를 고려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더 늘어야 할 것이다. 아직 부족한 이론화 작업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각 해당하는 국가의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통계적 검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연구의 질적 전환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K C I

## 부 록

## 〈부록 1〉 변수특성

	Obs	Mean	Std. Dev.	Min	Max
대통령제/비례제	1684	.20962	.4071583	0	1
대통령제/다수제	1684	.1793349	.3837465	0	1
내각제/비례제	1684	.3355107	.4723089	0	1
내각제/다수제	1684	.1811164	.3852229	0	1
준대통령제/비례제	1684	.0463183	.2102359	0	1
준대통령제/다수제	1684	.0409739	.1982886	0	1
1인당 국내총생산(log)	1723	9.346059	1.033537	5.479552	11.53201
민주주의수준	1691	6.890597	4.627725	-8	10
총인구	1741	5.31	1.40	50.05633	1.31
정치경쟁성	1684	8.402019	2.173796	1	10
체제지속성	1706	34.56624	39.59852	0	206
의회내여성비율	1302	19.19315	13.90782	0	105.8643
중앙은행독립성	1452	.5712869	.2223737	.1345	.094
국내총소득	1669	1.38	7.24	5060000	8.87
세수	1337	17.55587	6.6775	.2041615	45.25294

## 〈부록 2〉 정치제도 조합별 국가분류

	국가명
대통령제/비례대표제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잠비크,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러시아,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대통령제/다수제	알제리, 아르메니아, 카메룬, 칠레,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이집트, 가나, 과테말라, 케냐, 카자흐스탄, 한국, 레바논, 멕시코, 모잠비크, 필리핀, 미국
내각제/비례대표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내각제/다수제	알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보츠와나,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태국, 영국
이원집정부제/비례제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폴란드, 남아프리카
이원집정부제/다수제	과테말라, 헝가리, 레바논, 모잠비크, 폴란드, 루마니아, 베트남, 한국

\* 주의사항: 시계열 자료로서 1년이라도 제도를 시행하고 변경한 국가들 모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에 중복된 국가들이 있음

## 참 고 문 헌

- 민인식 · 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학회.
- 민인식 · 최필선. 2012.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학회.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1(5): 1369-1401.
- Bernhard, Michael, Timothy Nordstrom, and Christopher Reenock. 2001. “Economic Performance, Institutional Intermediation, and Democratic Survival.” *Journal of Politics* 63(3): 775-803.
- Birchfield, Vicki, and Markus ML Crepaz. 1998. “The Impact of Constitutional Structures and Collective and Competitive Veto points on Income Inequality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4(2): 175-200.
- Cameron, Adrian Colin and Trivedi, P. K. 2009.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College Station, Tex: Stata Press.
- Chang, Eric C. C., Mark Andreas Kayser and Ronald Rogowski. 2011. *Electoral Systems and the Balance of Consumer-Producer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z, Cesi; Keefer, Philip and Carlos Scartascini. 2016.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2015*.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Duverger, Maurice. 1967. *Political Party*. London: Methuen & Co. Ltd.
- Easter, Gerald M. 1997. “Preference for Presidentialism: Postcommunist Regime Change in Russia and the NIS.” *World Politics* 49(2): 184-211.
- Fabbrini, Sergio. 1995. “Presidents, Parliaments, & Good Government.” *Journal of Democracy* 6(3): 128-138.
- Garriga, Ana Carolina. 2016. *Central Bank Independence in the World: A New Dataset*. *International Interactions* 42 (5):849-868.
- Gerring, John, and Strom C. Thacker. 2004. “Political Institutions and Corruption: The Role of Unitarism and Parliamentar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2): 295-330.
- Gerring, John, Strom C. Thacker, and Carola Moreno. 2005. “Centripetal Democratic Governance: A Theory and Glob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4): 567-581.
- Horowitz, Donald L. 1990. “Comparing Democratic Systems.” *Journal of Democracy* 1(4): 73-79.
- Knutsen, Carl Henrik. 2011. “Which Democracies Prosper? Electoral Rules, Form of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Electoral Studies* 30(1): 83-90.
- Lardeyret, Guy. 1991. “The problem with PR.” *Journal of Democracy* 2(3): 30-35.
- Lijphart, A. 1991. “Constitutional Choices for New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2(1): 72-84.
- \_\_\_\_\_. 1992.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Linz, Juan J. 1990.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1): 51-69.
- \_\_\_\_\_. 1994.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Vol. 1. JHU Press.

- Lopez-Pintor, R. 1987. "Mass and Elite Perspective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Democracy." In *Comparing New Democracies*, edited by E. A. Baloyra, : 79-106. Boulder, CO: Westview
- Mainwaring, Scott. 1993. "Presidentialism, Multipartyism and Democracy: The Difficult Combin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6(2): 198-228.
- Mainwaring, S. and M. S. Shugart. 1997.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arshall, Monty G., Ted Robert Gurr and Keith Jagers. 2015.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3*. Center for Systemic Peace
- North, D.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 Olson, Mancur. 2008.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Yale University Press.
- Persson, Torsten. 2005. "Forms of Democracy,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No. w1117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Persson, Torsten, Gerard Roland, and Guido Tabellini. 2000. "Comparative Politics and Public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6): 1121-1161.
- Persson, Torsten, and Guido Tabellini. 2004. "Constitutions and Economic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8(1): 75-98.
- \_\_\_\_\_. 2005. *The Economic Effects of Constitutions*. MIT press.
- \_\_\_\_\_. 2006. "Democracy and Development: The Devil in the Details."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319-324.
- Powell, G. Bingham. 2000.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Visions*. Yale University Press.
- Power, Timothy J., and Mark J. Gasiorowski. 1997. "Institutional Desig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0(2): 123-155.
- Reynolds, Andrew. 1995.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Southern Africa." *Journal of Democracy* 6(2): 86-99.
- Riggs, Fred W. 1988. "The Survival of Presidentialism in America: Para-Constitutional Practic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9(4): 247-278.
- Rodrik, Dani. 1996. "Understanding Economic Policy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1): 9-41.
- Shugart, Matthew S. 1995. "The Electoral Cycle and Institutional Sources of Divided Presidential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327-343.
- \_\_\_\_\_. 2004. "Elections: The American Process of Selecting a President: A Comparative Perspective,"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4(3): 632-655.
- Shugart, Matthew S., and John M. Carey. 1992.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pan, Alfred and Cindy Skach. 1993. "Constitutional Framework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Parliamentarism versus Presidentialism." *World Politics*, 46(1): 1-23.
- The World Bank Group.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he World Bank.

# The Political Economic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

Focusing on Associative Effects between Form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Sung-Woo Lee (Korea University)

---

## Abstract

---

This article aim to analyze that the associativ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especially form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have a influence on political economic orders in a country. This article established six variables - political regime durability, political competi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economic institution's independence, national economic living, government capability - as dependent variables. On Analyzed result, this article found that the associativ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make some significant effects to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depending on several institutional conditions of a country. Also, this article found that political institutions make a very different effects to a society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Based on results, this article argue that political elites have to consider the associative effects with electoral systems when their country need to changes of form of governments and that peoples have to look discreetly through the expectation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reform.

Key words: Political Institution, Form of Government, Electoral System, Associative Effect, Political Economy

---